

유흥주점 업주들 호소...“영업 못하는데 세금 꼬박꼬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제한된 나이트클럽·감성주점·롤라텍 등 유흥주점 업주들이 거리로 나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26일 오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을 차례로 찾았다.

오후 2시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언자로 나선 김기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표 대리 대행은 “저희 유흥업은 현재까지 약 10개월 동안을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금도 1원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당국과 정치권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우리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면서 “유흥 업주들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김 대리 대행은 “10원 하나 지원하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여당·야당 당사 앞서 시위

“10개월 영업 못 했고 지원금도 못 받아” 주장해

“영업 허가든, 지원책 강구든 대책 적극 논의해라”

지 않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희들에게 영업을 허가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책을 강구 해주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집회 시작 전 그동안의 영업정지 기간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3월22일~4월5일(15일간) ▲4월8일~4월19일(12일간) ▲5월9일~8월4일(88일간) ▲8월19일~10월11일(54일간) ▲10월25일~10월31일(7일간) ▲11월24일~현재까지이다. 단체는 국민의힘 당사 앞 시위 이

후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2차 시위를 진행했다. 여기서도 발언자로 나선 김 대리 대행은 “3000만원 재산세, 5000만원 월세, 직원들 3000만원 급여 무엇보다 총당하겠는가”라면서 “도둑질을 할까, 강도질을 할까”라면서 소리쳤다.

영등포구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박모(65)씨는 “지난해 영업 두 달하고 문을 닫았다”면서 “영등포시장 부근에서 영업하는데, 1200만원의 임대료는 꾸준히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안 따를 수는 없지만,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오모(41)씨는 “생활전선 때문에 집회에 참가하게 됐다”면서 “지금은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다. 막노동, 배달대행, 대리운전 등”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월세 60만원, 딸 학원비 30만원을 벌어야 하는데, 작년에 한두 달 빼고는 (종업원 일을) 1년을 쉬었다”고 밝혔다.

노원구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한모(64)씨도 “가계를 담았는데도 임대료와 관리비, 770만원의 중과세까지 나간다”면서 “제일 억울한 건 중과세다. 상업지구 안에서 유흥업소에 대해 내게 돼 있는 세금인데 영업도 안 하고 낸다”고 말했다.

단체는 1시간가량 여당과 야당 당사 앞 시위를 진행한 후 ‘집합금지명



26일 오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유흥주점 사장들과 종업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거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령 즉각 철회조치 마련하라’,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투쟁하자’는 구호를 외친 후 시위를 마쳤다.

이날 시위는 10인 이하로 진행됐다. 경찰과 총동 등 돌발상황은 없었다. 기동취재본부



다음달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한국초저온 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 초저온 보관소를 점검하고 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자 58명 소재도 못 찾아”

교육 당국이 올해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을 찾고자 경찰 협조를 받았으나 58명은 아직 소재도 모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기준 초등

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입학 예정 아동 133명의 소재를 찾아달라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도별로 경기남부경찰청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19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부산 9명, 서울 7명 등 순이었다.

경찰은 수사 의뢰한 133명 중 75명

의 소재를 파악했다. 초등학교 취학을 연기했거나 해외출국, 비인가 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예비소집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은 58명은 해외 출국 여부만 파악했을 뿐 정확한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40명은 해외 출국 중이며 남은 18명은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

“박원순 성희롱 맞다”...피해 주장 사실로 인정

“박원순 전 시장의 성적 언동, 성희롱 해당”
“피해자 주장, 참고인 진술로도 인정 가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었다.

25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개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박 전 시장 성추행 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약 5시간 뒤인 오후 7시께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 직후 10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박 전 시장이 낮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

과 손을 (박 전 시장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이와 같은 박 전 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 주장 외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 인정이 어렵다”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 의혹을 살피기 위해 수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강 단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실무 총괄 담당은 최해령 인권위 차별시

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경찰은 약 5개월에 걸친 수사 이후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 수사와 관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고발인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인 전 비서 A씨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